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09(금) ~ 2022.12.15(목)

제공일시 2022 12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09(금) ~ 2022.12.15(목)

제공일시 2022 12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보다 탄소 배출 많으면 수출 불이익'... EU 탄소국경세 내년 10월 시범실시

- EU가 12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합의하여 내년 10월 준비기간에 들어감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3~4년 뒤 본격 시행예정이며, CBAM 시행에 맞춰 탄소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은 단계적으로 폐지됨
- 한편,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후,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음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이달 말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대(對) 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 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임

(한국경제, 2022.12.13) 김소현 기자  
(이데일리, 2022.12.13) 최정훈 기자  
(경향신문, 2022.12.13) 박상영 기자  
(임팩트온, 2022.12.13) 홍명표 기자

### 2. "美서 노조활동 이유 불법 해고시 금융피해 배상 확대"

- 앞으로 미국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불법 해고하거나 좌천시킨 고용주는 관련 노동자의 신용카드 연체료와 의료비 등 금융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함
-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이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할 경우, 고용주에 부과하는 피해 보상과 처벌 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음
-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복직과 밀린 임금만을 보전받아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고용주들은 피해 노동자의 의료비와 육아 비용, 이민 수속과 비자 관련 비용, 집과 자동차 처분 손실뿐 아니라 연체 수수료까지 모두 배상해야 함
- 이는 노동계의 큰 승리로, 스타벅스나 아마존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분석했음

(연합뉴스, 2022.12.14) 임상수 기자

### 3. G7 기후협력체 '기후클럽' 출범... 탄소가격·친환경 원자재 추진

- 주요 7개국(G7)이 '기후클럽(The Climate Club)'을 결성하면서, 국제적인 의제의 핵심이 '기후대응'으로 완전한 국면 전환을 이뤘음
- 12일(현지시간) 개최된 G7 화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회원국들은 '기후클럽'을 공식 출범시켰음 기후클럽은 '야심찬 포부(Ambition)', '과감한 행동(Boldness)', '협력(Cooperation)'의 앞글자를 딴 'ABC 원칙'에 입각해 향후 정책 방향을 꾸려나갈 예정임
- 기존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기후금융과 시장 메커니즘 등 '과감한' 조치를 도입한 뒤, 개별국이 아닌 모든 국가들에 기술협력을 비롯한 참여를 유도해 '협력'하면서 기후대응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기후클럽은 ▲국제사회의 통일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감독 기준 ▲온실가스의 명시적 가격(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등)과 내재적 가격(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각 기업의 내부적인 비용) ▲개발도상국 대상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 등 청정에너지 전환기금 등을 추진할 예정임

(뉴스트리, 2022.12.13) 이재은 기자

## 1. 네이처 액션 100+ 내년 100개 기업 선정 예정

- 기후투자자그룹인 기후행동 100+(CA100+) 자연자본 버전인 네이처 액션 100+가 내년에 자연자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100개 기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영향을 줄이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임
- 네이처 액션 100은 현재 11개 투자사가 함께 하고 있음 CA100+의 경우 전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높은 167개 기업을 정해 해당 기업의 탄소감축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해오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생물 다양성에도 하겠다는 것임
- 12월 19일까지 열릴 예정인 몬트리올 COP15는 최종합의안 도출을 준비중인데, 초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급망과 포트폴리오를 망라하는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 자연에 대한 피해를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구받을 전망임

(Reuters, 2022.12.12) Isla Binnie 기자

## 2. 美, 인류 최초 '핵융합' 점화 성공... "상용화까진 수십년"

-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연구진들은 핵융합 점화 기술을 이용, 투입한 에너지 대비 150% 수준의 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음
- 이번 연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무한 청정에너지로 향하는 첫걸음을 뗐음
- 핵융합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핵분열 기술과 달리 방사성 폐기물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 등 전통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음
-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진전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용화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했음

(뉴스1, 2022.12.14) 정윤영 기자

## 3. MSCI, 생물다양성 및 삼림벌채 기업 특정하기 위한 MSCI 도구

- MSCI는 투자자들이 생물다양성 손실과 삼림벌채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기업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구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2023년 초에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틀에는, MSCI 생물다양성-감지 영역 스크리닝 지표가 포함돼있어, 투자자들은 숲, 삼림벌채 전선, 종풍부지역 등 생물다양성 관련성이 높은 지역에 물리적인 자산을 가진 기업을 식별할 수 있음
- 특히 직접적 혹은 공급망을 통해 삼림벌채와 관련이 있는 기업을 식별함 MSCI는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COP15에는 이 사항을 발표했다

(ESGToday, 2022.12.15) Emily Shain 기자

## 1. 산림청, '해외산림ESG 국내 적용방안 연구' 착수

- 산림청은 국내 주요 기업의 ESG 투자 확대를 산림 분야 투자 활성화와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산림 분야 환경 사회 투명경영(ESG)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음
- 이 연구용역은 고려대학교 ESG 연구센터에서 수행했으며, 지난 4월 4일부터 약 8개월간 진행하여, 주요 연구 내용은 ▲해외 조림 사업 등 산림 관련 국내 및 해외 기업 ESG 사례 분석 ▲국내외 주요 ESG 지표 내 산림 관련 항목 분석 ▲국내 기업 산림 활용 ESG 모델 제안 ▲산림과 ESG 연계 방안 제시 등이 있었음
- 연구결과 사례를 보면, 애플은 콜롬비아 및 케냐에서 맹그로브숲과 초원 보호 사업 등 산림 활동을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산림 활동을 통해 16만7000톤이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탄소중립을 달성했음
- 산림청은 해외산림사업을 통해 ESG, 탄소중립 등에 기업이 동참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파이낸셜뉴스, 2022.12.12) 김원준 기자  
(비즈니스코리아, 2022.12.12) 허성수 기자  
(데일리안, 2022.12.12) 배군득 기자

## 2. 5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 20% 이상 물질 재활용한다

- 해양수산부는 13일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개최,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개선해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한다고 12일 밝혔음
- 이번 대책은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 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및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출 예정임
- 또,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함
- 이에선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의류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 해양폐기물의 염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재생 원료 품질을 올리는 전처리·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등이 있음

(머니투데이, 2022.12.12) 김훈남 기자

## 3. '탄소중립 유탄유' 광고에 첫 시정명령 예정...정부 "그린워싱 판단"

-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탄소중립 유탄유'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SK루브리컨츠(현 SK엔무브)에 광고를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금명간 내릴 예정임
- 이에 더해 SK에너지, GS칼텍스, 포스코에도 탄소중립 휘발유, 탄소중립 원유, 탄소중립 LNG 도입을 광고한데 대해 광고를 시정하라고 행정지도(권고)할 예정임
- 기업들이 주로 해외에서 조성된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의 배출권을 구매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의 탄소중립은 스코프1,2에 대한 것으로 스코프3만을 갖고 탄소중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행정처분 이유를 설명했음
-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린워싱 예방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며, 광고 및 온실가스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자 20여명을 모아 공동작업반이 구성될 예정임

(한국일보, 2022.12.14) 신혜정 기자

## 1. 국내 기업 24곳,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

- 한국생산성본부는 10일, '202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이하 DJSI)' 평가결과를 공개했음
- 올해 DJSI 평가 결과, 월드 지수에는 글로벌 2555개 평가대상 기업 중 12.8%인 326개 기업이 편입됐고, 이 중 국내 기업은 24개 기업으로, 월드 지수에 신규 편입된 곳은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포스코홀딩스, 기아자동차, 삼성SDS임 삼성증권, S-오일 등임
- 현대건설은 13년 연속, 미래에셋증권, SK, LG전자는 11년 연속,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0년 연속, 삼성SDI는 8년 연속, KB금융지주,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7년 연속 편입됐음
- 이어 삼성물산은 6년 연속, LG생활건강, 현대제철은 5년 연속,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는 2년 연속 편입됐음
- DJSI 아시아 퍼시픽 지수에는 평가대상 609개 기업 중 25.6%인 156개 기업이 편입됐고, 국내 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DJSI 코리아 지수에는 205개 평가대상 기업 중 25.4%인 52개 국내 기업이 편입됐음

(뉴스핌, 2022.12.10) 정성훈 기자

## 2. 'RE100' 가입만 해놓고... 국내기업 25곳 중 13곳 재생에너지 구매 '0'

- 12일 중앙일보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RE100 가입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25곳 중 13곳은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REC 구매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한 곳에 불과했고, 현대자동차·KT·네이버·삼성SDI·KB금융 등 13개 기업은 올해 녹색프리미엄·REC·PPA 등의 구매 실적이 '0원'이었음
- 나머지 대부분은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했는데, 이 제도를 선호하는 건 평균 입찰가가 MWh(메가와트시)당 1만원 선으로, REC(1REC=1MWh)의 6분의 1 수준인 저렴한 가격 때문임
- '녹색 프리미엄'은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해, 미국·유럽 등이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정부 정책 변화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이 겹친 게 주된 이유로 거론되지만, 기업의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중앙일보, 2022.12.13) 고석현 기자

## 3. 생산부터 운송 활용까지...2050년 2조달러 수소시장 열린다

- 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2조610억달러(한화 약 267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소산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음
- 올해에만 전 세계 43개국에서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600건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투자 규모는 2400억 달러에 달했음
- 우리 정부 역시 수소경제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수소 경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수소 생산·저장·운송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수소 정책은 수소연료전지차와 발전용 연료 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에 집중돼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생태계가 '그레이 수소'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도 제기됨

(헤럴드경제, 2022.12.09) 김지윤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2.09(금) ~ 2022.12.15(목)

제공일시 2022.12.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 EU, 러시아 연료 의존도 낮추기 위해 REPower 정책 수정안 결의하고 200억 유로 추가 자금 마련

- 유럽연합이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리파워(REPower) EU 정책에 200억 유로(약 27조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이번 합의는 유럽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함으로써 EU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내년 발효 전까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함
- 리파워 EU 정책은 지난해 5월 최종 발표됐으며,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이번 추가 자금의 60%는 EU 혁신기금의 보조금, 40%는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금을 통해 마련될 예정임. 자금 할당 비율은 회원국들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투자 가격 상승, 유럽 결속 정책(cohesion policy)을 고려해 반영됨
- 8000억 유로(약 1113조원) 규모의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은 EU 회원국들의 저탄소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한 수익을 저탄소 기술이나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함
- 올해 유럽 탄소시장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도 추가 자금원에 속함. 유럽위원회는 당초 탄소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새로운 에너지 투자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음. 최근 유럽 내 탄소 공급 및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탄소배출권 거래량도 증가함
- 이번엔 마련된 200억 유로의 추가 자금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저장지원, 탈탄소 산업, 재생에너지 그리드 통합, 전력 저장 및 무배출 운송 지원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될 예정임
- 이번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임.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이 제안이 탄소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EU 탄소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함. 반면 체코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은 EU에게 필요한 투자와 개혁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며 “EU 에너지 부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함
- 스페인은 “유럽은 러시아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면서 석유 인프라 적응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자금 투자는 EU의 2030년 및 2050년 기후 목표에 대응해야 하며, 회원국들이 투자 자금을 받은 만큼 에너지 자립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
- 15일(현지시간) EU의회는 리파워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독립형 에너지 저장소를 확대하는 수정안도 의결함. 기존에는 공동 에너지 저장소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에너지 저장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독립형 저장소까지 넣기로 함
- 여기에는 열 펌프, 전력, 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재생에너지를 난방 및 냉방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저장소를 모두 포함함. EU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핀란드의 펌프 수력 및 공동 소재 배터리 저장소 등 에너지 저장소 구축을 국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나갈 것임
- 한편 EU는 내년 더 많은 가스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천연가스(LNG) 장기 계약 및 공동 구매를 추진할 계획임. 향후 2년 이내 가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7% 줄일 수 있도록 각 회원과의 협의도 가속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2.12.19) 김환이 기자

(Energy Storage, 2022.12.15)

(Reuters, 2022.12.14)

(Reuters, 2022.12.14)

- 싱크탱크 브루젤의 시니어 펠로우인 시몬 타글리아피에트라는 “2030년까지 총 가스 소비량은 30%, 즉 1000억 입방 미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의 가스 공급 대부분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함
- 유럽연합이 가스 공급 계약에 발벗고 나선 건 내년 가스 부족 사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임.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내년에 가스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 빨리 행동할 것”을 촉구함. IEA 추정에 따르면, EU는 내년 270억 입방미터(bcm)의 가스 부족에 처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EU는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가스공급에 의존하고 있음. 가스 소비량의 대부분을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유럽이 ‘에너지 식민주의’라고 비난함
- 천연가스 생산으로 인한 메탄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집트는 수출용 LNG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이 최고치에 이룸. 2021년 후반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증가했으며, 화석연료 수요와 화물 수송량 모두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EU도 메탄이나 탄소 배출 문제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